

국가科學技術자문회의



趙完圭

〈과총고문/서울대 명예교수〉

文民 정부의 새로운 의지

문민정부 출범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새로 구성됐다. 이보다 앞서 1989년 6월 1년반의 한시적(限時的)기구로 정부수립후 처음 대통령에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할 기구를 구성 운영하였고 1991년 5월에는 이 기구를 상설화하여 운영하였다. 새 정부에서도 헌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새 진용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였다.

급성장하던 경제가 주춤해졌고 지적소유권, 물질특허제 등 규제로 인하여 예전처럼 남의 나라의 기술을 얻어오거나 모방할 수 없게 된 때에 경제성장의 근간인 과학기술에 관하여 국가원수의 자문에 응할 기구를

설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대학과 과학기술계의 숙원이 이루어졌고 산업계 등이 기구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또 당시의 여러 여건으로 보아 통치권자의 의지를 읽는 계기가 되어 모두 흡족했고 이 기구가 낙후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시적 기구였을 때와 제1기, 2기의 자문회의의 활동이나 정부의 대응을 평가할 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한시적 기구였을 당시에 자문회의의 활동은 1년 반 지속됐지만 그동안 자문안건의 제시도 없었고 또한 기한이 끝나가는 1990년 12월 하순, 지극히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1시간가량 그간의 활동내용과 건의사항을 국가원수에게 보고드렸다. 이처럼 자문회의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부서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인해 결국 이 기구는 유명무위(有名無爲)하여 학계나 과학기술계에 허탈과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한때 형식적 기구로 지탄

1991년 5월 소장학자 3~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첫 활동을 개시한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그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또 분기마다 대통령에게 안(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고 직접 자문사항을 지시하는 등 그전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운영하여 고무적이었다. 몇 가지 부처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있었고 과학기술개발은행 설립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자문회의의 설치이유나 그에 거는 기대에 비추어 그 역할과 역량은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새출발에 기대를 건다

위원장 상근제는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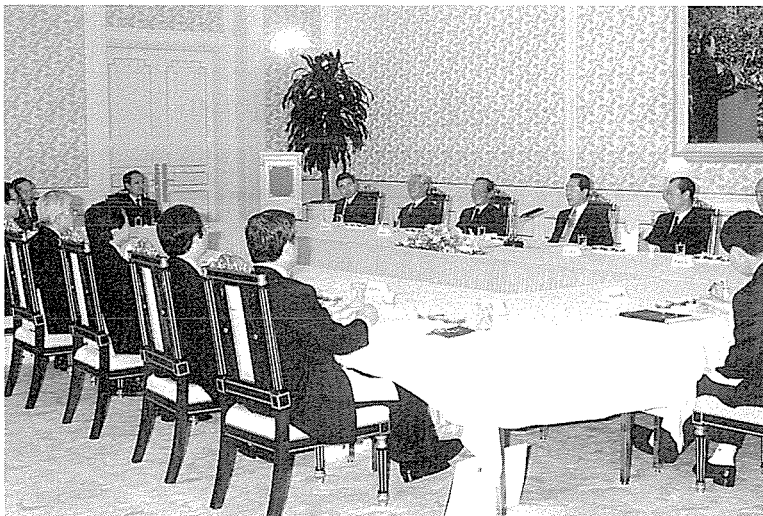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자문회의는 그 활동이나 운영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먼것번 것과는 달라야 한다. 특히 위원장을 상근으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이 기구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육성과 관계되는 긴요한 안건중 대통령의 의지와 권위에 의하여 실현시킬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성안되기까지는 철저한 여론수렴과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성안된 건의사항은 국가원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통치권자나 관련부처는 건의사항이 전문가의 연구와 국민들의 공감에 의해서 성안됐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력히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특히 지난날 그랬듯이 투자와 관련되거나 지원체제와 관련된 것이면, 국가원수의 각별한 지시가 있다고 해

도 이를 묵살 또는 반대하는 등 과학기술자나, 산업계의 의기(意氣)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汎部處 위상의 자문기구

또한 과학기술자문회의를 마치 과거처의 일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정부부처가 모두 관련된 범부처적인 자문기구인 것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구성된 이유가 과학기술진흥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사정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각 부처는 새로 출발하는 자문회의가 그 기능을 다하고 국가원수가 과학진흥의 역사적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발족하는 자문회의의 알찬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제2기 과학기술자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베풀었다.